

금융당국 “암호화폐 손털 기회 1년 반 동안 줬다”

미신고 거래소 섰다운 계획 고수

9월 출제쇄로 기한 5개월 남았으나 아직 정부에 신고한 거래소 없어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섰다운)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연쇄적인 거래소 섰다운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암호화폐를 청산할 기회를 1년 반 동안 줬다며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섰다운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3일 “거래소나 투자자들에게 자산을 청산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며 “지난해 9월 23일 특금법이 제정되고 시행일인 올해

3월 25일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이라는 실무차이 기간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대규모 섰다운과 투자자 손실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시장에서는 거래소 신고가 의무화되면 가장 먼저 중소형 거래소가 도태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시중 은행들이 금융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중소형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

좌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사업자로 정식 신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미 실명계좌를 사용 중인 대형 거래소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도 실명계좌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불법

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다. 대형 거래소도 못 믿겠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에 신고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신고 기한이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대형 거래소마저 섰다운 정부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 상대라면 대부분 거래소가 미신고 상태로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투자자들도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조치를 고민했지만, 사실상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세월호 특검과 이동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결실”

민주 윤호중 비대위원장, 국회 통과 임박에 “공직 청렴성 도약”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가 임박한 것과 관련 “2013년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8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 정부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과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법의 통과로 사후 처벌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길이 열리게 됐다”며 “공직사회 청렴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법안 심사·국정감사 등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 회피 신청을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또한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우리당은 관련 법 제정과 국회법 개정에 신중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상황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민주당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필수(必)환경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우선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녹색융합 클러스터법, 에너지전환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그린뉴딜 핵심법안들도 중점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호응했다. /뉴시스

식품클러스터 방문 투자유치 활동 ‘구슬땀’

민주 김수홍 의원,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익산시 갑)이 지난 23일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국식클)를 찾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산단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행보를 이어갔다.

23일(약 7만명)의 전문식품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국식클은 지난해 기준 전체면적 대비 분양률은 52%, 분양기업은 102곳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김 의원은 국식클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지난날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국식클 분양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익산상공회의소 김원오 회장과 함께 국식클진흥원에 방문하여 국식클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풀무원(피피이씨글로벌빌리지(주))에 방문한 김 의원은 김치 상품 수출에 도움되는 ‘지리적 표시제’ 법제화 건의 등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업이 거려온 곳을 풀어주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유호상 기자

이어 더원푸드, 네오크레마, 코야바이오, 답꽃을 연이어 방문하여 기업 대표 및 임원을 만나 기업경영 여건 및 투자유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김 의원은 “기업방문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방해만 될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기업에 방문하고 있다”며 “국식클에 입주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살펴 개선해나간다면 2단계 국식클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수홍 의원은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신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투자유치의 핵심이다”며 “익산이 명실상부한 식품산업의 메카가 되려면 국식클 입주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울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지권에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행사위, 고창소방서

소방안전 체험교실 방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23일 고창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체험 시설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고창소방서에서 운영중인 소방안전체험교실은 화재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사립비 3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3월에 준공했다.

체험교실에는 응급처치 교육, 119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화재대피로 체험, 완강기 사용법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설치돼 있다.

고창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체험교육을 소규모 그룹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고창소방서는 전북도 최초로 군 단위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방문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이 지난 22일 삼례읍 문화체육센터에 문을 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백신 접종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장은 백신 접종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와 갑자기 정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UPS와 비상발전기, CCTV 등 예방접종센터에 필요한 장비 도구를 살펴봤다. 또한, 접종 현장에서 집중을 마친 주민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불편한 점을 살피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완주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삼례읍 삼봉로 215)에 마련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근무인원은 의사 4명, 간호사 13명, 행정요원 20명, 응급구조사 1명, 콜센터 3명 총 41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만18세 이상 완주군 전체 접종대상자에 대해 이번 2분기에는 65세 이상을 3분기에는 18~64세 주민을 접종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방접종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군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시의회 5분 발언

40년된 동물원 드림랜드 재정비를

이남숙 전주시의원
안전성 확보 시급성 지적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서
명품 놀이시설 건립 필요



임대 기간은 올해 종료 예정이다. 드림랜드 확장·이전이나 재정비의 건의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의 안전성과

“놀이거구를 타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접을 수 없었다” 휴일인 지난 18일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전주동물원 내 드림랜드를 찾은 정모(44)씨 얘기다. 그는 “언제 설치했는지 모를 정도로 낡은 모습의 놀이기구를 아이들이 즐기는 게 마냥 좋아보이지는 않았다”며 “전주의 사정이 이러니 최신 시설이 있는 대전 같은 타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980년 첫 선을 보인 전주동물원 드림랜드를 전면 확장·이전하거나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3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다.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2동)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동물원과 40년 가까이 해온 놀이시설인 드림랜드에 대한 확장·이전이나 재정비 방안을 적극 논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드림랜드는 첫 운영 후 12년이 지난 1992년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존 시설을 철거 후, 10종의 놀이시설(기부채납방식)을 다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또 10년이 흐른 2002년에는 전주시가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현재 민간에서 임대 운영 중이고

노후 문제다. 현재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기구는 모두 13종 중 77%에 이르는 10개의 기구가 1992년 설치 후 30여년 유지·보수를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현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 철거 조건으로 별도 사용을 요청한 기구를 뺀 대부분이 사용 20년이 지났다. 문제는 이런 기구가 전면 교체 없이 도색이나 부품 교체 등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분기별로 한 번 이뤄지는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있지만 언제까지 검사에만 의존한 채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냐”며 안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서도 명품 놀이시설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거점형 관광 브랜드 측면에서 파크 개념의 시설 조성을 검토해야 하고 시설 건립이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변 지역을 명품 시민 테마공원으로 확장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면 한옥 마을 중심의 관광 브랜드를 확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에 드림랜드 이전 및 신축 사업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절실

김원주 전주시의원

도시재생 성공 전략 제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혁신적 전략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의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난 23일 전주시의회 김원주(도시간설위원장,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은 제3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후·반촌과 팔복동 등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종 공유 공간의 지역자산화 통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후·반촌과 팔복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결과 주거형 총괄사업 부문에 선정된 곳이다. 인후·반촌은 2016년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 도심 쇠퇴 문제가 심각하다. 팔복동 역시 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 쇠퇴로 인구가 급격하게 유출돼 고령 인구 비율이 30%인데다 협소한 도



로에 막다른 골목길 많은 빈집 등 주거여건이 열악하다. 시는 이들 지역에 2024년까지 550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50호를 공급하고,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

김 의원은 “이들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은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해당 사업 역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해 새로 조성한 공간이 끝까지 그 지역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을 강조한 것은 각종 한계로 설립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에 비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대안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단순한 사명감이나 봉사정신 위주로 운영하다 생존에 실패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많다”면서 “이제는 공공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겸비한 공적 조직으로 지역자산을 운영하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혁신적 전략을 통해 지역의 재생·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미래세대연구회, k-뉴딜 바로 알기 강연회

K-뉴딜 바로 알기 강연회가 전주시의회 연구단체 미래세대연구회의 주최로 지난 23일 전주사회혁신센터에서 개최됐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K-뉴딜 바로 알기 강연회는 시리즈 형식으로 디지털 뉴딜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진행된 첫 강연회에서는 디지

털 뉴딜 및 사회안전망 뉴딜 분야를 주제로 강진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차장과 한동승 전주대학교 교수가 사업 분야별 목표와 필요성,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설명하고 전주시민의 특화된 전주형 뉴딜 사업 세부 분야 및 이를 위해 필요한 학술연구 주제에 대해 여러 제언을 했다. /김윤상 기자